

끊이지 않는 청소년 렌터카 사고 “신분검증 법제화해야”

매년 잇단 10대 무면허 렌터카 사상 사고 증가세 ‘면허 검증시스템’ 운용 의무화·신분증 교차확인 제3자 운전 엄벌규정 제도와·성숙한 시민의식 중요

운전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이 렌터카를 몰다가 사상자를 내는 사고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렌터카 업체의 신원 검증 절차를 의무화하고 대여 요건을 강화하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13일 오후 11시42분께 목포시 상동의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에서 동갑내기 고교생 5명이 탄 렌터카와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고등학교생 5명 중 2명이 숨지고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등 총 3명이 숨졌다. 나머지 학생 3명과 승용차 운전자 등 4명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길에서 주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

다.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던 10대가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6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6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지난해 11월6일 오전 8시10분께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의 도로에서는 A(17)군이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빌린 렌터카를 몰다가 3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후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 3대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군과 동승한 친구 3명, 다른 차량 운전자 등 총 6명이 다쳤다. 앞서 같은해 2월10일 오후 2시께 대전시 중구의 교차로에서도 B(18)군이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수입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가 숨지는 등 3명의 사상자가 났다. 2018년 6월26일 경기 안성에서는 C(18)군이 또래 친구·동생 4명을 태우고 빗길 과속 운전을 하다가 미끄러

져 인근 상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군 등 4명이 숨졌고 1명이 크게 다쳤다. A군은 분실한 운전면허증으로 무등록 업체에서 총 3차례나 차량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업주는 이들 일행이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차량을 내준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405건이다. 8명이 숨졌고 722명이 다쳤다. 같은 기간 광주·전남에서는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 80건이 발생, 3명이 숨지고 165명이 다쳤다. 연도별로는 ▲2015년 7건 ▲2016년 13건 ▲2017년 19건 ▲2018년 18건 ▲2019년 23건 등으로 증가세가 꾸준하다. 일각에서는 렌터카 업체가 차량 대여자의 신분을 대조 검증할 시스템을 정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렌터카 업체에 설치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청소년이 도용 면허로 불법 대여를 시도할 경우, 성명·연령 등 면허 소지자의 신



대전중부경찰서는 지난 10일 대전 중구 부사동 대흥네거리에서 10대 운전자가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11일 밝혔다.

상 정보를 확인해 동일인물이 아님을 가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국적으로 시스템 보급률이 절반을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목포에서 발생한 렌터카 사고 차량을 빌려준 업체도 해당 시스템을 운용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시스템 가

입·활용 의무화가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아울러 면허증 외에도 주민등록증 등 2개 이상의 신분증을 대조 확인할 수 있도록 법으로 엄벌 규정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행법상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업주에게는 과태료 20만원만 부과된다. 허술한 대여자 신원 검증과

법적 미비 속에서 업주들의 탐욕에 의한 무분별한 차량 대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춘호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교수는 “차량 대여자가 면허 소지자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대상부터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동검증시스템 운용을 의무화해 보급률을 높이고, 대여자가 복수의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해 엄격히 교차 검증해야 한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또 “면허 취득 일자·차량 운전 이력 등 차량 대여 요건 자체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미국처럼 운전 이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대여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 등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통경찰 관계자는 “업체 측의 법적 책임이 예매한 경우도 많다. 성인 대여자가 렌터카를 미성년자에게 양도하는 제3자 운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법적 정비와 더불어, 청소년 운전 자체를 금기시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안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봉우기자

광주권익위 “민간공항 의견 유보...특위 구성·연내 결정”

상생 분위기 먼저 조성 후 이전 찬·반 여부 최종 판단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2019년 6월 8일 오전 광주 광산구 공군제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41회 공군참모총장배 스페이스 챌린지(Space Challenge 2019) 광주·전남 예선대회 축하비행을 한 뒤 착륙하고 있다.

광주 공군공항 이전과 얽혀있는 민간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가 이전 여부에 대한 공식 의견 개진을 유보했다. 대신, 특별위원회를 꾸려 이전할지, 존치할지에 대한 공식 입장을 연내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또 2018년 ‘무안공항 활성화 협약’을 바탕으로 시·도 간 상생 분위기를 조

성과 민간·군 공항의 패키지 이전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 최영태 광주시 시민권익위원장은 17일 권익위 전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장시간 논의했으나, 최종 입장은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간·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시·도 간 갈등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행

정적 입장에도 미묘한 변화들이 일고 있는 데 따른 숨고르기로 보인다. 시민권익위는 대신 금명간 교통분과위원회와 외부 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항 이전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거친 뒤 전체회의를 통해 연내 위원회의 공식 입장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전제조건도 내걸었다. 최 위원장은 “2018년 8월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상생 협약을 맺은 만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상생 분위기를 먼저 조성할 것과 민간·군 공항은 병렬적 입장에서 (패키지로) 이전해야 하고 이를 위해 시·도가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상생 분위기를 먼저 조성한 뒤 후 이진 찬·반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민간·군공항 이전에 대한 시민 공론화 작업은 최소한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정기자

광주 노점단체 “노점상도 2차 재난지원금 지원해 달라”

지원대상에 노점상 빠져있어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광주지부 등은 17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점상에게도 2차 재난 지원금을 평등하고 투명하게 지원해 달라”고 주장했다. 노점단체는 “최근 광주시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자영업자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원 대상에 노점상은 빠져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지자체의 요구에 협조하기 위해 영업을 하지 않았다. 이 같은 노점상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노점상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노점상 지원 과정 실태 조사·규제 조건 완화 ▲코로나19 재난시기 노점상 단속 중지 등을 요구했다. 노점단체는 “국가적 재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함께하겠다. 노점상의 경제활동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오유나기자

광주, 아동학대 사회안전망 ‘츄츄히’

조사 전담공무원 배치·광역전담기구 구성

광주시가 공공 중심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12월까지 북구 1명, 광산구 6명의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내년까지 총 25명의 전담공무원을 5개 자치구에 배치해 피해 아동보호와 공적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 다. 기존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중인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재학대 예방을 위해 사례관리계획 수립, 모니터링 등을 집중 관리하는 사례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7월 정부 사회관계장관회의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아동·청소년 학대방지 대책’과 관련, 광역단위 현장 점검과 상호 협의를 위해 시, 교육청,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를 설치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추진 상황 점검과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동복지본부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털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